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제199호

노다 정권의 과제와 전망

()

- I. 노다 정권의 과제
- II. 한일정상회담
- III. 미일정상회담
- IV. 미일동맹
- V. 동아시아 지역구도와 미국의 동맹전략

I. 노다 정권의 과제

1) 엔고대책과 세금인상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최대 난제는 엔고 문제 대책과 세금인상 문제 해결일 것이다. 엔화 상승을 저지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이후 2차례에 걸쳐 시장개입을 했고 선진7개국(G7)과 협력을 하고 있지만 엔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유럽 재정위기 사태가 촉발시킨 2011년의 세계금융위기 과정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엔화의 가치는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 여하튼 엔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수출이 활력을 얻기 어렵고 ‘잃어버린 20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낮춘 상태에서 일본은 국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11 동일본 대지진의 천문학적인 복구비용 마련도 중차대한 과제이다. 결국 재정적자를 줄이고 재해 복구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선부른 세금인상은 내각 지지율 급락으로 직결될 우려가 높다. 간 나오토 총리도 세금 인상 문제로 지지율 급락의 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2) 노다의 정치성향

노다 총리의 정치성향은 대단히 보수적이고 우경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다 총리는 ‘야스쿠니에 전범은 없다’는 발언을 통해서 전쟁범죄를 부정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여 왔고, 야스쿠니 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섭에는 단호히 대응한다

는 입장을 총리 취임 후에 밝히기도 했다. 총리의 이러한 정치성향은 한일관계와 한중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며, 한중일 협력이 절실한 일본외교에 큰 부담을 지워줄 것이다. 노다 총리는 역사인식 뿐만 아니라 영토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주장을 되풀이 해왔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크게 비판해 왔으며, 하토야마 총리가 제창했던 '동아시아 공동체론'을 지지하지 않는다. 또 노다 총리는 민주당의 선거공약과는 달리 외국인 참정권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다 총리의 정치성향은 민주당의 이념성보다는 자민당 보수와 훨씬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노다 총리는 자신의 정치성향을 어떻게 자제하면서 대외관계를 원만하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3) 민주당의 정체성

어떤 사람은 민주당을 '아프가니스탄' 이라고 부른다. 일본정치가 몇 몇 개인에게 충성을 바치는 아프가니스탄의 부족연합체와 같은 수준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비꼬아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하토야마의 '동아시아 공동체론'과 같은 리버럴한 인식에서 노다의 '야스쿠니에는 전범이 없다'는 극우적 역사인식 사이에서 그 정체성이 표류하면서 이념적으로 분해되고 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민주당은 언제든지 심각한 정쟁에 빠질 수 있고 당은 분열될 수 있다. 당내 정쟁과 분열은 노다 총리의 지지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지뢰가 될 것이다.

4) 원전 문제

2011.3.11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세계적 공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노다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서 원전 재수출 의지를 표명했다. 1기에 수십조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원전 개발과 수출을 장기침체의 경제 상황에서 포기하기에는 미련이 크겠지만 원전 재수출 결정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과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노다 총리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유엔본부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일본 시민들의 불안감과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원전 재가동 및 수출 문제는 동일본 재건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해결이 늦어질 경우 뜨거운 정치 쟁점이 될 수 있다.

II. 한일정상회담

유엔회의를 무대로 9월 22일 뉴욕에서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노다 총리는 일본이 납치문제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으며 한일FTA 협상이 가속화되길 희망했다. 한일 정상은 이 회담에서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과거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성숙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는 공통의 인식하에 조선왕실도서 반환, 부품·소재분야 및 FTA 협상 재개 환경 조성 등 경제협력 강화, 인적 문화 교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를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한·일·중 3국 협력, 기후변화 대응, 핵안보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노다 총리의 우경화된 정치성향에도 불구하고 만약 미일관계 복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다 총리는 한국과 중국을 자극하여 한일관계, 중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상황은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것이다. 야스쿠니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존중하겠다는 최근의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Ⅲ. 미일정상회담

9월 21일 뉴욕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노다 총리는 미일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 시간은 35분이었고, 다소 경직된 분위기에서 실무적으로 회담이 진행되었다고 전해진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텐마 기지이전 문제는 결과를 도출할 때가 됐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은 전략적인 현안' 이라면서 노다 총리를 압박했다. 오바마는 정상회담에서 일본정부가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의미에서 회담 분위기를 경직되게 연출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후텐마기지는 오키나와 나고(名護)시로 이전하기로 작년 5월 양국이 합의했지만 오키나와현의 반발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미국은 또 아시아 태평양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TPP)에 일본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일본이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부담감으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

노다 총리가 미일동맹은 일본외교의 근간이고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측의 약속 이행 없이는 미일관계, 미일동맹의 복원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대미약속은 복잡한 일본 국내정치 사정으로 쉽게 이행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Ⅳ. 미일동맹

일본의 예산 결정과정은 2009년 민주당 집권 이전까지는 일반인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하자 민주당은 선거 공약대로 '예산리뷰패널' 을 설치하여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과정을 시민의 눈에 보이는 과정으로 만들어 버렸다.

패널은 국회의원, 산업계, 언론, 그리고 학계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예산 리뷰 과정은 심지어 인터넷에 생중계되기도 한다.

2011년 봄에도 예산 논쟁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때 일본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 예산이 쟁점이 되었다. 일본은 1978년부터 방위비를 분담해왔는데 2010년 예산은 33억 달러 규모였다. 미국측은 일본과의 양자협약에서 이 예산의 증액을 요청했지만 일본 방위성은 이해적으로 공개적인 반발을 보였고, 분담금의 증액은 일본 자위대 예산의 삭감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 9월 중국 어선과 일본 해안경비함의 충돌 사건 이후 중일 관계가 험악해지자 일본의 여론은 미일동맹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결국 2011년 방위비 분담금은 2010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만약 2010년 9월의 중국어선 충돌 사건이 없었다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2011.3.1 동일본 대지진 때 미군이 보여준 구호재난활동(일명 도모다치 작전)은 일본의 여론을 더욱 친미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미일동맹은 다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긴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재정적자의 일본 정부는 정부 예산 삭감 압력을 대내외적으로 강하게 받고 있는데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도 틀림없이 다시 삭감 압력에 노출될 것이고 그 때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변화한 일본의 예산과정이 후텐마기지 문제처럼 일본 정부를 대단히 난처하게 만들 것이다.

V. 동아시아 지역구도와 미국의 동맹전략

그 동안 대단히 예측 가능한 관료적 프로세스를 보여주었던 미일동맹은 일본 정치지형의 변화로 말미암아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관계로 변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대로의 사정으로 일본은 일본 나름의 사정으로 미일동맹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은 일본의 정치적 우선순위와 국내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동맹 목적을 재정의하려고 할 것이고, 일본은 일본대로 자위대의 역할을 재난구호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물론 미일동맹은 협력을 확대할 분야도 많다. 일본 정부는 최근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게 할 것이고, 일본의 군수산업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무기개발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번 5월에 미국과 공동 개발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의 수출을 허용한 것

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미일동맹은 이처럼 변화와 새로운 협력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점은 일본의 정치와 정책결정시스템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후텐마기지 문제처럼 양국이 합의를 해도 잘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미일동맹의 현실이다.

미국 상원의 존 매케인 의원, 칼 레빈 의원 등은 후텐마의 해병대 기지를 카데나(Kadena) 공군기지로 통합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만약 해병대 기지를 공군 기지에 통합할 경우 공군 기지의 수용능력은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일고 있다. 전략적 중요성을 따지자면 카데나 공군기지의 중요성이 후텐마의 해병대기지보다는 훨씬 크다. 카데나 공군기지를 대체할 곳은 지리적으로 찾기 어렵다. 후텐마기지는 팔로 옮길 수 있지만 카데나 공군기지는 옮기기 어렵다. 따라서 후텐마와 카데나기지를 통합하는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후텐마기지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서 미일동맹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미일동맹은 미국에게 여전히 앞으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전략적 기반으로 기능하겠지만 미국은 장차적으로 한미동맹, 미국-호주 동맹 등을 강화시킴으로써 미일동맹이 축소되는 것에 대비하려고 할 것이다. 일본 정치의 가변성과 정책결정과정의 장기적 교착성은 미국으로 하여금 미일동맹의 이해득실을 다시 계산하게 만들 수도 있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의 군사비 예산에 대한 삭감 압력은 이런 경향성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노다 정권의 보수회귀 정책들(미일동맹 복원, 중국견제, 원전 수출 재개, 전범 인식, 사무차관 회의의 부활 및 정치-관료관계 복원 시도 등)은 '시대역행적'으로 보인다. 일본 정치와 미일관계의 구조적이면서 역사적인 변화는 '미일동맹의 비용절감과 목표의 재정 의', '아시아 시대의 도래', '일본정치의 개혁'이라는 방향으로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데 노다 정권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무도 흐르는 강물을 내내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다.(2011/09/30)



※코리아연구원(연구기획위원장: 이정철)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 또는 전화(02-733-3348)로 회원 등록하실 수 있으며,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과 아름다운 동행을 권합니다.